Revista Iberoamericana, 20-1, 2009 : 85-116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유화 요인*

김 기 현
단독 / 선문대학교

Kim, Ki-Hyun(2009), Las causas de la nacionalización de la industria petrolera de América Latina, vistas a través de los casos históricos.

En el presente artículo se analizan las causas de la nacionalización de la industria petrolera de América Latina en el contexto histórico. En general, se dicen que la nacionalización se realicen por la ideología como el nacionalismo. Pero nosotros buscamos estas causas de la nacionalización en los términos económicos, los cuales se evaluan por el costo y el beneficio. En América Latina, la industria petrolera ha experimentado dos olas de nacionalización respectivamente en los años treinta y los sesentas y los setentas. En cada período, las nacionalizaciones se cumplieron por su propia racionalización económica con la única excepción de México. A través de analizar estos casos históricos, demostramos que no sólo en el presente sino también en el pasado la nacionalización de la industria petrolera en América Latina se ha realizado principalmente por las causas económicas más que las ideológicas.

[México / Perú / Venezuela / industria petrolera / nacionalización;
멕시코 / 페루 / 베네수엘라 / 석유산업 / 국유화]

---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 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 조성사업비)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62-B00024).

서 론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그에 대해 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논문을 통해 최근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김기현, 2009). 그의 결론을 우선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며, 또 라틴아메리카에서 국유화 현상이 여러 산유국가들 중에서 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유화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원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보다는 각국이 자신들의 석유산업이 처한 구체적 조건에 따라 각자 합리적 선택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유화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경제적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유화 요인의 범주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범주의 정의가 다소 전횡적이고, 분류도 주관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국유화 요인은 크게 보아 이데올로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라면 우선 좌파정부의 국유화 이데올로기와 민간기업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외국기업에 대한 전반적 거부를 나타내는 우파 혹은 중도파의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유화는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경제적 손익의 균형 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국유화를 말한다. 물론 모든 국유화의 요인을 어느 한 쪽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양쪽의 요인이 모두 혼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여 필자는 라틴아메리카 최근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이데올로기적 요인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최근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각국의 석유산업이 처한 구체적인 경제적 조건에 따라 각 국가가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론을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에 나타났던 다른 석유

산업의 국유화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서, 그러한 현상이 단순히 최근에 와서 새롭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빈번히 나타났던 하나의 전형적 형태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즉 최근에 와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라틴아메리카의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원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오히려 각국의 석유산업이 처한 구체적 상황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았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그야말로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는 석유산업이 시작된 20세기 초반 이래 지금까지 크게 두 번의 국유화 바람이 있었다. 1930년대에는 멕시코를 비롯해 남미 지역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했으며, 1960-70년대에는 페루,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세계적 국유화 바람에 동참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시기에 나타나는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유화를 단행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유화 요인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추구한다.

I. 1930년대 석유 산업 국유화: 석유산업 발전 우선 정책

1. 1930년대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의 전반적 경향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유화 경향은 각국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당시 라틴아메리카 주요 산유국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4개국[1]에서는 석유산업의 국유화보다는 생산 증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 국가들은 세금 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국가통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했다. 이들 국가들은 외

1) 1920년대 중남미에서 석유수출 및 자급자족 국가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페루, 에콰도르이다. 콜롬비아는 1920년대 석유수입국이었지만 1930년대에 석유수출국으로 전환했다.

국석유회사들과 상대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석유회사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남미 남부 지역에서는 대공황 이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수입대체산업화의 필요성이 점진적으로 부각되고 있었다. 석유산업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정유공장 등을 직접 설립함으로써 국내부가가치를 올릴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으로 석유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와 같은 남미의 석유 수입국들은 국내 정유공장을 건설하고, 국내 소비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석유산업의 전반적 경향은 우루과이,[2] 아르헨티나, 브라질,[3] 볼리비아 등 석유생산이 부족한 석유 수입국에서는 대공황 이후 수입대체 산업화 모델에 따르는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대세를 이루었고, 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이 당시 석유를 수출하거나 자급자족함으로써 석유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들에서는 생산 증대의 필요성에 따라 국유화보다는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석유산업 개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당시 석유 수출국이었던 멕시코 석유산업의 전면적 국유화는 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대공황 이후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자국화 시도

1920년대의 중남미 석유산업은 확장의 시기였다. 이 시기 중남미는 석유산업은 개발을 위해서 외국 자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석

2) 우루과이는 1931년 국영 정유공장(ANCAP)을 설립했다. 그리고 ANCAP은 영미 메이저사가 아닌 소련에서 원유 수입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메이저사들과 긴장을 유발하기도 했다.

3) 브라질은 처음부터 석유산업을 국가가 통제한 유일한 나라이다. 석유산업의 민족주의 정책에 따라 브라질은 1938년에 국가 석유위원회(Consejo Nacional del Petróleo: CNP)를 설립하였고, 1953년 헤툴리오 바르가스 정부 시기에는 국영석유회사(Petróleos Brasileños, Petrobras)를 설립하였다. 이들 기관을 통해 브라질은 석유의 탐사와 채굴, 정유부문에서 국가의 배타적 역할을 1990년대까지 유지해 왔었다.

유산업은 무엇보다 중남미가 부족한 자본과 기술의 집약산업이며, 탐사의 결과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데 최소 5년에서 길게는 20년이 걸리고, 정유와 최종 상품의 판매 등과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의 엘리트들은 대부분 석유 산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그 결과 중남미 석유산업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지배하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적극적 개발로 인해 1920년대 말 중남미 석유산업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석유의 공급과다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4] 그로 인해 석유개발은 중지되고 석유기업들은 생산을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실 석유의 과다한 개발 문제는 대공황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다. 전 세계 석유산업을 둘러싼 서구제국주의 국가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각축으로 인한 공급 과잉과 소모적 가격 경쟁을 끝내기 위해 영-미의 7대 메이저 석유회사(뉴저지 스탠더드사: 현재의 엑슨, 뉴욕 스탠더드사: 현재의 모빌, 걸프사[5], 텍사코, 캘리포니아 스탠더드사: 현재의 셰브론, 로열 더치 셸, 앵글로 페르시아사: 현재의 브리티시석유회사, 이하 BP)들은 1927년 셸사의 디터딩 경의 스코틀랜드 성 아크나카리에서 기존의 시장 분할 및 점유를 받아들이고, 은밀한 세계 카르텔 가격을 정하고, 이전의 소모적인 경쟁과 가격 경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윌리엄 엥달, 2007: 115-117). 메

4)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세계 석유초과 공급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급속한 개발이었다는 점이다. 뉴저지 스탠더드사는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기존의 지분에 더해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에서의 지분을 확대함에 따라 중남미에서 최대의 석유회사로 성장했다. 셸사 또한 중남미에서 지분을 꾸준히 유지해왔는데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그들의 생산을 집중했다. 셸사는 에콰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에서도 이미 탐사 개발허가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이들 나라에서의 생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집중했다. 셸사는 세계 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그들의 세계 공급량의 약 3분의 1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셸사와 스탠더드사는 베네수엘라 석유생산의 약 92%를 차지하게 된다. 그 결과 1937년 베네수엘라 석유생산은 일평균 512,247 배럴로서 세계 총생산 5,566,426배럴의 9.2%로, 미국 62%, 소련 9.45%에 이어 세계 3위에 도달했다. 그것은 멕시코의 일평균 생산량 128,511배럴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양이다(Philip, 1982: 47).

5) 걸프사는 1984년 셰브론사에 합병되었다.

이저들의 아카나카리 협정이후 중남미 각국의 석유생산량은 메이저들의 생산 쿼터 조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일부 국가의 경우는 카르텔에 의해 석유보존지역으로 분류됨에 따라 자원 보유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투자와 개발이 유보되기도 했다.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유가의 대폭락과 석유생산의 감소라는 현상을 야기했다. 그리고 1932년에 미국은 보호관세를 통해 해외로부터 원유수입에 대한 제한을 가했다. 그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중남미의 석유수출업자들이었다. 독일과 일본에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가 출현할 때까지 세계시장에서 원유의 구매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보호주의적 관세로 인해 미국시장에의 판매가 중단된 원유는 국제시장에서 거의 바닥 가격에서 거래되었다. 이 와중에 일부 국가는 자국 석유산업 육성을 위해 석유산업의 국유화 혹은 국영석유기업의 설립과 같은 정책을 실현하게 되었다.

3. 국가 통제 강화 수준의 국유화: 아르헨티나

그 대표적 사례가 아르헨티나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07년 파타고니아지역에서이다. 그때부터 미국과 영국의 석유회사들은 아르헨티나 석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외국인 자본에 유연한 입장을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따라서 그 당시 이미 아르헨티나에는 스탠더드사를 악마에 비유하면서 민간자본이 석유를 개발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석유는 국가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세력을 대변하는 인물이 바로 엔리케 모스코니(Enrique Mosconi)이다. 그는 1922년에 라틴아메리카 최초로 설립된 국영석유회사 YPF (Yacimiento Petrolíferos Fiscales)의 장으로서 석유자원의 국가 소유와 통제에 대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총체적인 이론과 목표를 세운 사람이다. 그의 생각은 아르헨티나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석유산업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Solberg, 1979: 132).

1929년에 모스코니는 우루과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그의 아이디어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1931년 우루과이 국영에너지 기업인 ANCAP(Administración Nacional de Combustibles, Alcohol y Portland)의 설립에 씨앗이 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모스코니는 볼리비아, 브라질, 심지어 멕시코의 석유산업 국유화 혹은 국영기업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1938년에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멕시코의 라사로 카르데나스 대통령은 십년 전 자국을 방문한 모스코니의 연설을 듣고 그와 유사한 형태의 석유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그의 사상을 실현했다 (Solberg, 1979: 179-182).

<표 1> 아르헨티나 석유생산

(단위: 입방미터, %는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YPF 생산	민간기업 생산	수입
1922	1,118 (0.6%)	22,323 (12.2%)	158,451 (87.0%)
1930	178,650 (18.5%)	442,998 (46.0%)	340,147 (35.3%)

자료: Solberg, 1979: 93의 표에서 발췌

솔베르그의 주장에 따르면 1930년대 석유산업의 국유화에 있어 이데올로기의 영향은 결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스코니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조차 국영석유회사의 설립이 석유산업의 국가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에서 국영석유회사 YPF의 생산 비중은 1922년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는 하지만 1930년에도 그의 비중은 불과 18.5%에 불과하다.

반면 국가의 석유산업 개입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들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허용되었다. 그에 따라 1911년 뉴저지 스탠더드사는 석유판매에서 높은 수익을 올린 후, 1917년에는 탐사에도 참여했다. 로열 더치 셸사는 탐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으나 정유능력의 부족으로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지 못했다. 앵글로페르시아사는 약간의 석유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영국석유회사들로 구성된 페로카릴레스(Ferrocarriles)는 국가 석유 위원회와 그의 관할 영역에서 석유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와 생산의 일부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석탄 운송이 주 업무인 페로카릴레스는 지역 석유산업의 발전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음으로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여 1922년 전체 소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서 1930년 46%로 증가했다.

아르헨티나의 석유산업 국유화 정책은 급진당의 이리고옌(Hipólito Yrigoyen)이 1928년 선거를 앞두고 제안한 그런 급진적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리고옌의 그러한 급진적 제안은 명백히 선거전술용이었다. 그 자신도 석유산업의 완전 국유화는 국가의 투자 여력 부족과 정치적 반대로 인해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석유산업 국유화는 결국 이리고옌에 의해서가 아니라 1930년 쿠데타 이후 급진적 국유화에 반대하는 군부에 의해 실현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국유화가 보수적인 군부 정권에 의해 단행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국유화가 급진당의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산물이 아니라 국가의 합리적 판단에 따르는 결과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은 국유화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1932년 보수적인 군부 정권은 이리고옌의 제안 중 석유산업의 연방화, 새로운 유전 개발권의 국가에 독점적 부여라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만을 골라 입법 제안하였고, 그것은 1935년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입법 통과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비록 국영석유회사에 완전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민간 석유기업들의 석유수입과 판매를 보장하고, 기존에 양허된 지역에서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온건한 형태의 것이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석유산업 국유화는 멕시코와 같이 외국석유기업의 국가 수용과 같은 급진적 형태는 아니었으며, 기존의 외국 석유기업의 생산 활동은 유지한 채 석유산업에 있어 국영 기업의 비중을 증대하고, 석유산업 정책에 있어 국가 주도권을 회복하는 차원의 온건한 석유산업 국유화였다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국유화라 부르기보다는

국가 통제 강화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국유화 정책이 실현된 데에는 급진당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보수 세력들도 그러한 차원의 국유화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외국 자본에 의해 아르헨티나의 석유가 강탈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정부가 독자적으로 석유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자본과 기술에 있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그를 허용하되 그러한 지원이 자신들의 자원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Philip, 1982: 180-181).

즉 1930년대 중반까지 아르헨티나 석유산업의 발전은 매우 미약했다. 따라서 그때에는 이리고옌과 급진당의 자원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생산의 증대를 위해 석유산업의 개방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석유산업의 국유화도 석유산업에 대한 완전 국유화를 의미하지는 않았다(De las Casas, 2007: 22-23).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중남미에서 최초로 국영석유회사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외국기업과 함께 공존하는 모순적 행보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유화 정책은 외국 기업의 존재를 계속 허용하는 온건한 형태의 것이었다. 이것은 아르헨티나의 국유화 정책이 이데올로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자국 석유산업의 발전이라는 전제 하에서 실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4. 석유산업 개발을 위한 국유화: 볼리비아

볼리비아 석유산업의 국유화 또한 급진적인 청년 장교 그룹에 속하는 토로(David Toro)가 '국가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실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외국 기업들에 의한 볼리비아 석유산업 발전이 한계에 달했다는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

볼리비아는 중남미에서 최초로 유전이 발견된 나라이다. 1867년 처음으로 석유개발권이 허용된 이후 1875년 동부 산타크루스지역에서 중남미

최초의 유전이 발견되었다. 초기에는 볼리비아 회사들이 개발을 시도했으나,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초 외국계 석유회사들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볼리비아에서는 보수파들조차 석유는 다른 경제활동과 달리 국가 주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외국자본보다는 국내 자본에 의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 기업 특히 뉴저지 스탠더드사의 정치적 개입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반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 사아베드라(Bautista Saavedra)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하자 그는 외국 자본의 유입을 시도했다. 뉴저지 스탠더드사 또한 여러 가지 공작을 통해 석유산업 진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더드사는 석유 운송 문제로 인해 기대만큼 석유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에 대해 석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는 볼리비아 정부는 칠레를 통한 수출 파이프라인 건설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스탠더드사의 생산 증대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더드사는 볼리비아 석유산업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줄여나갔고, 그에 대해 볼리비아인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특히 차코전쟁 동안(1932-35) 볼리비아 정부는 스탠더드사에 석유공급증대를 요구했지만, 스탠더드사는 비싼 가격을 요구하면서 볼리비아 정부에 비협조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석유산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볼리비아는 스탠더드사와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볼리비아인들의 스탠더드사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Klein, 1964: 50-55).

차코전쟁 패배 이후 볼리비아 정치는 급진화 되었고 그에 따라 좌파 정치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군부는 정치적 리더십을 상실함에 따라 군 내부에 급진적 청년 장교 그룹이 부상하게 되었다. 그중 한 명인 토로는 1936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좌파 정당들과 힘을 합쳐 '국가사회주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토로 정부는 석유부를 신설하고 국영석유회사 YPFB(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 Bolivianos)를 설립한 후, 스탠더드사가 그때까지 개발하지 않았던 양허권을 철수하고, 1937년에는 결국 스탠더드사를 완전 수용해버렸다.

볼리비아가 독자적으로 석유개발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 파격적인 스탠더드사의 완전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무엇보다 스탠더드사가 볼리비아 석유산업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탠더드사는 볼리비아가 원하는 수준에서 석유산업에 적극적 투자와 생산증대를 꾀하지 않았다. 따라서 볼리비아의 스탠더드사 국유화는 단순히 급진 청년 장교그룹들의 '국가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낙후된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5. 라틴아메리카 주요 산유국: 개방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국유화 그리고 우루과이와 브라질의 국영 석유회사 설립과 같이 석유산업에 있어 일부 국가 통제가 강화되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주요 산유국들은 대부분 석유산업의 국유화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1908년에 권력을 잡은 이후 외국기업들에 우호적이었던 독재자 후안 비센테 고메스(Vicente Gómez)가 1935년에 죽자 다소 불안함이 없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국유화의 위협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1936년 메이저 석유회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철회되었다. 메이저사들은 국유화 대신 생산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엘리트들을 설득했다. 또 그를 위해 미국은 작으나마 베네수엘라에 석유 수출 쿼터를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은 1933년 이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로 인해 베네수엘라 정치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멕시코의 석유산업 국유화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미국의 차별적 지원과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는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베네수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페루에서 뉴저지 스탠더드사의 자회사인 국제석유회사(이하 IPC)는 대공황 이후 정치적 분위기에 대해 우려하면서 현재 외국 석유회사들이 누리고 있는 매우 유리한 세금 체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추가적 투자는 중단한 채 기존의 유전에서 생산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추

진했다. 이러한 전략은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생산을 증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당시 페루 정부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콜롬비아도 세율인상보다는 생산증대가 우선 목표였다.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멕시코 국유화 이후 약간의 동요가 있었지만 결국 현상을 유지했다. 대신 1939년 계약 재협상을 통해 로열티를 7%에서 9%로 인상하는 수준에서 국유화를 대신했다.

6. 유일한 예외: 멕시코의 국유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석유생산국들이 생산증대를 우선하기 위해 외국 자본에 개방 정책을 유지한 데 비해, 멕시코만 유일하게 국유화를 단행했다.

멕시코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그의 규모면에서나 형태에 있어서 중남미 역사에 있어 가장 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비록 멕시코 혁명 정신을 반영하는 1917년 헌법 27조에 지하자원의 국가 소유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멕시코 혁명의 주요 이슈는 결코 아니었다. 디아스(Porfirio Díaz) 시대의 외국 자본 의존적 발전 정책에 반대하면서 석유 민족주의를 고려했던 일부 도시 중산층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혁명시기의 민족주의는 앵글로 색슨 프로테스탄트 문명에 대한 라틴 가톨릭 문명의 저항이라는 보다 보수적 성질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란사(Venustiano Carranza)를 비롯해서 헌법을 작성한 혁명군 지휘자들이 그러한 자원의 주권 조항을 삽입한 것은 석유회사를 통해 미국이 멕시코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다.[6] 외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등에 업고 멕시코 정치에 영향력을

6) 실제 마데로를 암살하고 권력을 잡은 우에르타의 뒤에는 영국계 멕시칸석유회사 "엘아길라(El Aguila)"사가 있었다. 엘아길라사는 1912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미군을 멕시코에 파견할 당시 멕시코 석유 절반에 대한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미국 록펠러의 스탠더드석유회사는 현금으로 10만 달러와 막대한 연료 차관을 포함해 총과 돈을 카란사에게 지원함으로써 영국석유업계로부터 멕시코에서의 이권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카란사가 미국석유회사들의 이익보다는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나아가자 스탠더드사는 1916년에 판초 비야를 지원하기도 했다. 멕시코 석유산업에 있어 영국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나마 1917년 헌법이 제정되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

발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통제할 헌법적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러한 헌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르데나스(Lázaro Cardenas) 이전 정부들은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았다.

한편 멕시코의 석유생산은 1922년 일평균 499,393 배럴로 정점에 달한 다음, 1932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했다. 그것은 석유기업들이 보다 저 비용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는 반면 멕시코는 보존지역으로 두려는 전략에 따라 투자를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탐사와 시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석유수입국으로 전락할 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멕시코로서는 외국 석유기업들의 이런 처사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게다가 외국계 석유기업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유가의 인상은 멕시코인들로 하여금 외국석유기업들이 멕시코를 착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Rubio, 2003: 3).

한편 카예스(Plutarco Elías Calles)의 보수적 정책으로 노동자 관련 보호 정책이 해체되고 대공황 이후에는 임금마저 삭감된 상황에 처한 석유노조는 1934년 이후 극단적인 강경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석유산업에 있어 국유화와 같은 극적인 조치보다는 다른 중남미 석유수출국과 마찬가지로 세금 인상과 같은 국가 통제의 강화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카르데나스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결국 석유산업의 국유화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카예스에 대응해서 카르데나스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멕시코 노동자 동맹(CTM)의 중심세력인 멕시코석유노동자조합(STPRM)은 롬바르도 톨레다노(Lombardo Toledano)를 중심으로 임금 지불 인상과 노동 권익 옹호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카르데나스 정부는 노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석유기업들의 양보를 요구하게 된다. 카르데나스 정부는 석유회사들이 1934년에서 1936년 사이 높은 수익을 거두었음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석유산업의 생산량 증대와 생산지 이전과 같

으로 1차 세계대전의 급박함으로 인해 이들 국가들이 멕시코에서 잠시 눈을 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엥달, 2007: 96-98).

은 자원개발 주권이 외국 기업의 손에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석유회사들은 정부의 그러한 중재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카르데나스가 국유화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7년부터 노조가 더 이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1938년에 들어서자 카르데나스에게 국유화 외에 다른 선택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결국 카르데나스는 1938년 3월 18일 석유산업의 완전한 국유화를 단행하게 된다.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외국 석유회사들의 강경한 입장이 카르데나스 정부로 하여금 전면적 국유화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었다(Philip, 1982: 221-226).

결론적으로 멕시코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국내 정치 기반 확대를 위해 석유노조의 강경노선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카르데나스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른 결과이다. 즉 당시 중남미 주요 석유수출국 대부분에서 나타났던 석유생산 증대 우선, 국가의 점진적 개입 확대 정책은 혁명을 경험했던 멕시코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해 갔다. 어쨌든 멕시코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석유산업의 규모가 의미 있는 수준에 달한 개도국에서 국가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석유회사를 추방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7] 석유패권을 둘러싼 서구 국가들의 각축의 장에서 주요 산유국인 멕시코가 석유산업의 주권을 확보하고 또 그를 지켜낸 것은 사실 당시로서는 매우 예외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

7) 1850년대 석유산업이 시작된 이래 1차 세계대전까지 석유산업은 100% 민간 기업에 의해 소유되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석유산업의 경영과 소유에 있어 국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석유가 군사적 산업적으로 점차 전략적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커졌고, 그로 인해 또 그의 수익성이 현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전까지 소유권의 완전한 국가 이전이라는 차원에서의 국유화는 결코 대세는 아니었다. 1960년대 이전에 이루어진 그러한 국유화의 사례로는 1917년 러시아, 1937년 볼리비아, 1938년 멕시코, 1951년 이란이 전부이다. 따라서 멕시코의 국유화는 전체 순서로서는 세 번째이나 러시아의 국유화가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의 산물이고, 볼리비아의 석유생산이 당시 별 의미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석유산업이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한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멕시코의 석유산업 국유화는 국유화가 경제적 조건에 따르는 국가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우리들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그 결과 멕시코의 석유산업은 국유화 이후 쇠퇴의 길을 가게 된다. 국유화 이후 영국과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멕시코 석유의 수출을 봉쇄하고, 관련 부품의 유입을 막았다. 그리고 47년 이후에는 막대한 보상금을 점차적으로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차관 공여 등을 방해했다. 석유회사들은 이러한 경제적 금융적 보복을 통해 국유화 이후 40년 동안 멕시코를 배척하였다. 그로 인해 멕시코는 1921년 당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석유 생산국이었던 것에 비해 1940년대에는 석유를 겨우 자급자족하는 수준으로 전락하였다. 국유화 이후 시작된 멕시코 석유산업의 쇠퇴는 197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다(Sánchez, 1998: 165).

따라서 멕시코 국유화의 경험은 다른 중남미 주요 산유국들의 국유화를 자극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inhibiting effects)를 가져왔다. 커브린(Kobrin, 1985: 21)에 따르면 멕시코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재앙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영향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다른 중남미 주요 산유국들은 멕시코의 경험을 통해 비록 외국석유회사들의 국유화는 가능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이 지배하는 석유산업의 국제시스템으로부터 고립을 의미함으로써 매우 높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멕시코의 국유화 경험은 다른 산유국들에 국유화를 확산하기보다 오히려 제어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930년대 라틴아메리카 산유국들의 석유산업 정책은 각국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석유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들에서는 석유생산증대를 위해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했다. 반면 석유산업의 비중이 작은 나라들에서는 수입 대체 산업화 모델에 따라 국가 주도 하에 석유산업이 육성되었고, 그중 일부 국가들은 국유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국유화도 단순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실현된 것이라기보다는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합리적 선택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멕시코의 국

유화는 이런 합리적 선택과는 다른 정치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 졌다. 따라서 멕시코는 국유화의 결과 1970년대까지 석유산업의 쇠퇴를 경험해야만 했다.

Ⅱ. 1960년대와 70년대의 석유산업 국유화: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1. 석유산업의 종속과 국유화

유럽 석유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1950년대 중반부터 중동석유에 대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기존의 메이저사로부터 독립적인 신생 석유기업들이 석유개발에 뛰어들어 메이저사들에 도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의 확대로 인해 유가는 다시 하락했고, 국제 석유시장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1960년 OPEC의 결성 이후 산유국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수익률을 유지함으로써 유가하락의 손실을 직접적으로 감내한 석유회사들에 비해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

게다가 "OPEC국가들은 석유자원 부존의 유한성과 외국 석유회사들의 무제한 개발 정책에 회의를 갖기 시작하였다. [⋯] 이에 OPEC국가들은 1968년부터 외국석유회사들에게 자국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0년 6월 OPEC 경제위원회는 회원국에 자국의 석유산업을 국가경제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를 지시하여 중동석유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강석영, 2007: 56).

그에 따라 1960년대에는 미얀마, 이집트, 인도네시아, 페루 등이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했으며, 1970년대에는 알제리,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나이지리아 등이 국유화를 단행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70년대에 석유산업에 있어 국가 소유의 비중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주요 산유국에 있어 1960년대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대세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도국에 있어서 석유산업을 포함한 모든 외국기업의 연도별 국가 수용 실태를 나타내는 <표 2>는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기업의 수용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서 1975년 사이에 정점에 이르렀다가,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말까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개도국들의 외국기업 수용은 다시 급격히 줄어든다.

한편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중반에 석유산업에 있어 외국기업의 국유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석유산업에 있어 국가의 참여를 크게 확대했다. 그 결과 1937년 볼리비아가 IPC를 국유화하기 이전에 중남미에 단지 3개의 국영석유회사가 존재했던 것에 비해, 1960년대 말에는 오직 에콰도르와 파라과이만을 제외하고 모든 산유국들이 국영석유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8)]

<표 2> 연도별 외국기업 수용건수와 국가의 수

연도	수용건수	국가 수	연도	수용건수	국가 수
1960	7	6	1974	68	29
1961	8	5	1975	83	28
1962	8	5	1976	41	14
1963	11	7	1977	18	14
1964	22	10	1978	15	7
1965	14	11	1979	28	13
1966	5	3	1980	12	7
1967	25	8	1981	5	3
1968	13	8	1982	1	1
1969	24	14	1983	3	3
1970	48	18	1984	1	1
1971	51	20	1985	1	1
1972	56	30	합계	**598**	
1973	30	20			

8) 중남미 국영석유회사의 설립연도는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YPF(1922), 우루과이 ANCAP(1931), 페루 EPF(1934), 볼리비아 YPFB(1936), 멕시코 PEMEX(1938), 콜롬비아 Ecopetrol(1948), 칠레 ENAP(1950), 브라질 Petróbras(1953), 쿠바 ICP(1959), 베네수엘라 CVP(1960).

자료: Kennedy, 1992: 69, 표1, 여러 자료에서 재인용

따라서 <표 2>에서 본 것처럼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중남미 석유산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외국기업의 국가 수용이 하나의 대세를 이루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케네디(Kennedy, 1992: 71)는 그러한 대세를 말하기 전에 1960-85년 시기에 발생한 대부분의 수용이 단지 28개의 정권에 의해 발생한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즉 조사된 79개 개도국에서 이 시기에 존재했던 300개의 정권 중 단지 28개 정권[9]이 같은 시기 전체 수용의 62%를 실현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수용은 '시위효과(demonstration effect)'[10]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수용을 자극함에 따라, 국유화는 보다 확산되었고 결국 외국기업의 수용이 이 시기에 대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28개 주요 정권이 왜 외국기업을 대량으로 수용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하면 이 시기에 왜 외국기업의 수용 즉 국유화가 대세가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대대적 외국 기업의 수용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그 나라에 강력한 외부적 종속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러한 강력한 종속관계는 식민지 혹은 지정학적 관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외국기업이 석유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전략적인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군사적 지원이

9) 그중 중남미 국가의 정부로는 1970-73년까지 칠레의 아옌데 정권(46개 기업 수용)과 1968-75년 사이 페루의 벨라스코 정권(47개 기업 수용)이 있다.

10) 커버린(Kobrin, 1985: 18-20)에 따르면 오일 국유화의 시위효과는 석유회사와 국가 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즉 앞서 살펴본 대로 1938년의 멕시코 국유화와 1951년의 이란의 국유화가 '제어 효과(inhibiting effects)'를 가져왔었다면, 1970년대 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와 알제리의 국유화는 국제 석유산업의 구조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외국석유기업이 국유화에 대응하는 제재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줌에 따라 오히려 다른 나라의 국유화를 자극하는 '도미노 효과(domino effect)'를 가져왔다고 한다. 커버린은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1970년대 이후 석유산업 구조 변화의 내용으로 첫째, 산유국들이 발전함에 따라 석유로 인한 세입보다 그에 대한 전략적 통제를 우선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둘째, 석유산업 발전을 위한 산유국들의 기술적, 행정적, 경영적 능력이 충분히 향상되었으며 셋째, 이차세계 대전 이후 기존의 메이저사가 아닌 다른 독립 기업들이 많이 세계 석유산업에 뛰어들었고 넷째, 1960년대 말부터 최소한 단기적일지라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으로써 1970년대 동안 원유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들을 들고 있다.

나 원조 등을 통해 서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종속관계가 종속국가 내부에서 강력한 반감을 야기하고 특히 그와 연계되어 있는 정부가 부패하거나 무능할 경우, 군사쿠데타나 사회혁명을 통해 아니면 선거에 의한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통해 새롭고 보다 급진적인 정부가 탄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탄생된 정권의 리더가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며, 군부의 지지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도 존재하지 않고, 지정학적 위험도 없다면 대량적 수용정책이 실행된다는 것이다(Kennedy, 1992: 72-79. 특히 75쪽의 <그림 1>참조).

결국 케네디에 따르면 외국 기업의 대량적 수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 조건은 강력한 외부적 종속 관계의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은 칠레의 아옌데(Salvador Allende), 브라질의 굴라르(João Goulart), 아르헨티나의 페론(Juan Perón), 볼리비아의 파스 에스텐소로(Paz Estenssoro) 정권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다. 네 개의 정권은 모두 산업의 국유화라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졌었다. 게다가 네 정권 모두 군부와는 다소 유사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옌데 정권은 대량적 수용을 단행한 것에 비해 다른 세 정권은 외국기업 국유화에 있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바로 이들 국가들의 외부와의 종속관계의 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아옌데 집권 시 칠레에서 외국기업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들(예를 들어 칠레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동 산업)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었다. 반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의 경우 이런 전략적 부문에서 외국인 기업들은 이미 국유화되었거나, 혹은 그러한 부문들은 한 번도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차이가 아옌데 정부와 다른 정부 사이의 정책에 있어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시 말해 대량적 수용 즉 전략적 산업의 국유화 정책은 바로 그러한 부문이 얼마나 많이 외국인들에 의해 종속되고 지배되고 있는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칠레 아옌데 정부의 국유화 정책은 그가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나 브라질의 굴라르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더 급진적이었기 때문이라

기보다는, 칠레의 경제적 조건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보다 더 급진적 정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960-19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 국유화를 이끈 동력은 석유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과다한 의존을 탈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이런 동력을 단순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호킨스(Hawkins et al., 1976: 7)의 말을 빌리자면 관련 산업에 있어 어느 정도의 기술이 확보되었을 때 천연자원에 대한 부의 정당한 분배를 위한 수단으로서 국유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한 국유화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국유화의 중간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쿠데타 직후 급진적인 군부 정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천연자원의 국유화는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한 국유화와 흔히 혼돈되기 쉽다. 하지만 군부에 의한 국유화가 명백히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의도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이데올로기적 동기에 의한 국유화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비석유수출국: 개방화 유지

석유기업의 국유화가 대세인 가운데서도 한편으로 비석유수출국[11]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의 대규모 증가를 가져왔다. 우루과이, 칠레, 브라질은 오래 동안 유지해온 석유산업의 국가 독점을 포기하고 석유탐사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했다.[12]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전의 민족주의 정책이 포기되었고, 외국인 투자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되었다. 콜롬비아에서도 석유정책은 여전히

11) 1960년대 석유수출국으로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가 있고; 석유자급자족국가로는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있으며; 주요 석유수입국으로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이 있다.

12) 브라질의 경우 석유산업의 마케팅 부문은 이미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었고, 탐사 부문에 있어서는 개방이 국내의 반대에 부딪쳐 주춤했으나 외국 기업이 석유를 발견할 시 그를 Petrobrás가 다시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개방이 단행되었다. 그러한 조치는 처음에는 외국석유기업들의 관심 부족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976년 BP의 참여를 시작으로 다른 회사들도 속속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978년까지 9건(엑슨사와 4건, BP와 두 건, Penzoil과 Hispanoil과 각각 1건)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보다 친기업적이었다. 심지어 석유수출국인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 조차도 이전의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국유화를 추진했다고 믿으면서 그와 다른 개방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자 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앞서 언급한 국유화의 조건으로서 전략적 산업의 과다한 외국 종속을 상기할 수 있다. 즉 전략적 산업이 외국자본에 과다하게 종속된 국가들 혹은 그 국가의 산업에서는 국유화가 적극 추진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 혹은 영역에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추진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멕시코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 라틴아메리카의 나머지 국가들은 새로운 탐사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할지라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무엇보다 라틴아메리카 이외에 북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좋은 조건의 탐사 대상지가 많이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일방적 국유화시 보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셋째, 산유국들이 세금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수익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신흥석유회사들과 유럽 국가들은 해외석유 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는 그런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것은 1970년대의 석유산업 국유화 바람 이후 해외투자에 있어 정치적 리스크가 투자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 국유화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시기적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3. IPC의 투자 감소와 페루의 국유화

페루의 벨라스코 알바라도(Velasco Alvarado) 장군이 뉴저지 스탠더드사의 자회사인 IPC의 국유화를 단행한 것은 민족주의 성향의 군부가 IPC를 정치적 공격의 효과적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크고, 인기 없고, 상대적으로 약한 외국 석유회사를 공격하는 것은 민족주의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 가장 효과적 수단이었다. 벨라스코는 쿠데타 후 IPC에 대해 강경

노선을 채택했고, 그로 인해 자신을 강경 민족주의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강경 민족주의자 평판은 벨라스코가 급진적 청년 장교 그룹과 그들보다는 보수적인 민족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쿠데타 이후의 리더십 투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했다. 그의 입장을 확인하자마자 벨라스코는 1969년 2월 IPC의 자산을 몰수[13]했으며 나아가 보상금 지불을 최종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Pinelo, 1973: 1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의 국유화가 단순히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68년까지 페루에서 지배적인 경제적 입장은 미국의 원조와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민간인, 군부, 정치엘리트들은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민족주의 입장을 피력하는 야당들조차 민족주의를 자신들의 궁극적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정부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적 수단으로서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수준이었다. 여론도 전반적으로는 IPC의 강경한 태도에 부정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줄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은 아니었다.

따라서 페루의 국유화는 결국 IPC사에 페루 석유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경제적인 판단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PC는 1913년 페루에 들어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엄청난 수익을 누렸다. 그리고 1935년 이후로 생산량이 증대하지는 않았지만 1960년대까지 페루는 석유수출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석유회사들이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대하지 않음으로 인해 1960년대부터 국내 소비가 생산을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IPC사가 페루에서 더 이상 투자를 증가

---

13) 외국 기업을 접수(take over)하는 형태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해진 과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주고 하는 수용(expropriation), 둘째는 그러한 과정과 보상 없이 외국 기업의 소유권과 통제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징발 혹은 몰수(requisition), 셋째는 국가가 기업과의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가에 유리한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세우는 계약의 재협상(renegotiation of contracts), 넷째는 외국 기업 소유의 자산을 정부나 그의 대리기관에 원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팔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강매(forced sale) 가 그것들이다(Hawkins et al., 1976: 5-6). 벨라스코 정부의 석유 산업 국유화 형태는 거의 몰수에 가까운 것이었다.

하지 않은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페루 유전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C사는 페루에서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정부와의 개혁 협상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면서 IPC는 동시에 페루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페루에서 IPC 주식의 가치는 약 8,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즉 IPC사가 석유산업에 더 이상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취한 것이 벨라스코 정부로 하여금 국유화를 단행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Cordey, 2005: 196-201).

4. 걸프사의 전횡과 볼리비아의 국유화

볼리비아의 석유산업 국유화는 그를 장악하고 있는 걸프사의 전횡이 근본적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걸프사의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도 국유화의 또 다른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 데벤포트(Davenport)법은 1937년 국유화 이후 볼리비아 석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다시 유치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건들을 제시했다. 그 법은 세율 30%, 로열티 11%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27.5%의 감세 허용과 같이 다양하게 빠져나갈 구멍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볼리비아 국내 세수를 초과하는 액수의 원조를 무기로 삼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볼리비아 석유산업에 진출한 걸프사는 여러 가지 전횡을 일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1969년 바리엔토스(René Barrientos) 대통령이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자 부통령이던 루이스 실레스 살리나스(Luis Siles Salinas)가 권력을 잡았다. 그는 석유 민족주의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석유산업의 완전 국유화는 아니었다. 실레스는 걸프사를 국유화하기보다는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자 했다. 그의 목표는 단지 걸프사가 세율 50%의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걸프사는 자신들의 협상력을 과신하며 실레스가 그러한 협상을 실현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처음에 그

의 제의에 반대했다. 그러나 걸프사가 살레스의 제의를 거절하자 볼리비아의 반외국기업 정서는 급격하게 증가했다. 1969년 중반부터 걸프사에 반대하는 캠페인은 확고한 모멘텀을 획득하게 되었다(Jova, 2006: 4).

그런 상황에서 1969년 8월 천연가스 완전 국유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것은 걸프사에 양허된 지역 내에 매장된 천연가스는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정부는 양허 계약에는 석유만 포함되지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다. 그에 대해 걸프사는 지지 세력을 구하기 위해 산타 크루스 지역에 향후 20년 동안 가스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은 '내정 간섭'으로 여겨지면서 볼리비아인들의 반 걸프사 정서를 보다 강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레스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오반도(Ovando)는 집권하자마자 1970년 10월 17일 걸프사와의 협상을 중단하고 국유화를 단행한다. 걸프사는 연간 백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납세한다거나 혹은 로열티를 23%로 인상해주겠다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걸프사와 협상할 뜻이 없었다.

오반도가 걸프사와의 어떤 협상도 거부하고 강경한 입장에서 국유화를 단행한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당시 걸프사가 산타크루스 지방 정부에는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중앙정부 예산에는 단지 6% 정도만 기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Tapia Quiroga, 2005: 52-53).

이러한 점들은 결국 볼리비아의 걸프사 국유화가 이데올로기적 동인보다 경제적 조건에 따른 판단이었음을 말해주는 좋은 논증 자료가 된다.

5. 합리적 수순으로서의 국유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는 이미 OPEC을 통해 외국석유기업들로부터 자국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국유화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상 크지 않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단지 외국 기

업들과의 다양한 계약 관계에 있어 마지막 정리 단계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에 있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변화가 시도된 것은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민주행동당(이하, AD)정부부터이다. AD 정부는 석유산업에 대한 세제변화를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석유회사들로부터 50-50 세제율과 석유노동자의 임금 상승에 기반을 둔 타협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AD는 석유산업의 국유화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1943년에 체결된 양허 계약이 만료되는 40년 후 1983년에 가서야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민족주의는 국유화보다는 가격정책, 세율 인상, 석유 보존 정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AD당은 1958년 이후 석유 보존 정책을 강화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외국인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되었지만 더 이상 외국기업들에게 새로운 개발 양허권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더 많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은 중동 석유개발 붐과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의 확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 물론 투자의 감소가 즉각적인 생산의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7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생산의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Hernández-Grisanti, 1974: 35-38).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일부 소수 정당만이 주장했을 뿐 대부분의 정치 엘리트들은 여전히 1983년 자연적인 반환까지 기다린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973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정당인 AD당의 페레스(Carlos Andrés Pérez) 후보가 석유회사들이 1983년 반환을 대비하여 더 이상 석유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음에 따라, 83년 인수 시 낡고 낙후된 산업을 이어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국유화를 앞당길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AD와 함께 양대 정당인 COPEI의 후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 후보 모두 국유화를 선거 이슈로 삼지는 않았다.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국유화 이슈가 표 획득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이익을 위해 서로 자제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베네수엘라의 상

황에서 국유화 주장이 가져올 정치적 불안정이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득표에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1970년대 라틴아메리카 어떤 나라에서도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베네수엘라만큼 인기 없는 나라는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 중남미 석유산업 국유화를 추진한 이데올로기적 동기는 '종속'이라는 문제였는데, 석유로 인한 혜택이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된 베네수엘라에서 종속의 이데올로기는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들에게는 영향을 주었지만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Philips, 1982: 308). 실제 1973년 대선에서 국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한 좌파 정당들의 득표율은 12%에 불과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산업 국유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1973년까지는 국유화를 위한 국내외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으로 베네수엘라의 민족주의자들은 석유의 국내외적 공급 수준을 조절하고, OPEC과 같은 국제 생산자 기구를 조정하고, 높은 세율을 유지하며, 석유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만족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유화보다는 국가에 덜 이로운 조건이었지만, 석유기업들과의 첨예한 갈등을 피하면서 국내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국유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정치권이 안정적인 정치적 틀을 무너트릴 수도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국유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74년 야당인 COPEI는 국유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에 대해 페레스 대통령은 2년 안에 그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베네수엘라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주요 석유 수출국들의 뒤를 이어 1975년에 그의 석유산업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급진적이지 않았다. 국유화된 석유개발 허가권의 대부분은 1983년까지 점진적으로 국가에 반환하면 되었다. 게다가 10여 년 전부터 국가가 석유회사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을 통해 거두어들이고 있었고, 국가가 세계 시장의 조건에 따라 석유생산 수준과 가격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왔었기 때문에 실제 국유화의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따라서 국유화의 목적도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의 수익을 증

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석유기업들 대신에 정부가 직접 투자를 증대하고 생산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Philip, 1982: 115-116).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산업의 국유화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대부분의 석유산업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OPEC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의 이익을 이미 국가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합리성의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의 국유화는 이미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국유화가 중남미에서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이루어진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외국석유회사가 원한 국유화: 에콰도르

1976년 에콰도르에서도 걸프사의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것은 국유화를 요구한 것이 국가가 아니라 걸프사 자신이었다는 점이다. 석유회사에 부과되는 높은 세율로 인해 걸프사의 수익률이 과거 15%-20%였던 것에 비해 70년대에 들어서는 5%대로 감소함에 따라 걸프사는 더 이상 에콰도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1960년대 페루 IPC사의 국유화 때만 해도 민간석유회사는 비록 사업 자체가 수익성이 고갈됨에 따라 국유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유화의 바람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의 어떤 협상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그에 비하면 걸프사의 이러한 요구는 세계석유산업의 환경이 매우 급속하게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미 석유산업의 국유화가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베네수엘라 등 주요 산유국에서 실현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대세가 된 마당에, 이제는 소유의 형태보다는 수익성이 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1972년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개혁적 민족주의 세력과 조심스러운 전통주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전자는 페루의 벨라스코주의자이고 후자는 브라질식 군부모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었다. 처음 대통령이었

던 로드리게스 라라 장군은 민족주의 개혁세력이었으나 대중적 인기와 조직적 지지가 부족했다. 따라서 군부 정권 하에서 국유화를 둘러싼 이러한 내부적 차이는 국유화와 관련하여 애매모호한 정책을 지속하게 했다.

따라서 에콰도르의 석유산업 국유화는 에콰도르 국영석유회사인 CEPE가 1974년 텍사코-걸프 합작사의 주식 25%를 매입하고, 1976년에 다시 걸프사의 지분 37.5%를 추가로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걸프사는 에콰도르에서 철수하였으나, 볼리비아 정부는 텍사코-걸프사의 지분 총 62.5%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결국 에콰도르 정부는 외국석유회사를 완전히 국가소유로 하지도 않았으며, 외국계 석유회사들의 존재를 여전히 허용했다. 걸프사와는 달리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에 남는 것을 선택한 텍사코는 여전히 3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Martz, 1987: 105-128).

결 론

1930년대와 1960-70년대 두 차례에 걸쳐 실현된 중남미 석유산업 국유화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각각의 시대에 있어 국유화는 중남미 각국에서 석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1930년대에는 석유를 수입하는 산유국 즉 국가 경제에 있어 석유산업의 비중이 크지 않은 나라들에서 전반적으로 수입대체산업화 모델에 따라 석유산업에서도 국가 개입의 강화 나아가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에 있어 석유산업의 비중이 큰 당시 석유수출국 혹은 자급자족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석유산업의 생산증대가 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국유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석유산업을 국유화한 나라들도 국유화의 동인은 근본적으로 석유 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 예로 아르헨티나의 경우 국유화는 외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과 외국 기업의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볼리비아의 국유화 또한 투자

를 적극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대한 반발이 국유화의 가장 근본적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석유수출국이면서도 생산증대가 목표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국유화를 단행한 멕시코의 사례는 이러한 전반적 경향에서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 멕시코의 석유산업은 1970년대까지 쇠퇴의 길을 걸어야 했다.

반면 1960-70년대에는 주요 석유수출국가 혹은 자급자족국가들에 있어서 국유화가 대세를 이루었다. 당시 국유화의 동인은 석유산업과 같은 전략 산업에서 종속 상태를 벗어나고자 함이다. 특히 석유산업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이 심한 나라들에서 국유화의 요구는 보다 강하게 일어났다.

페루와 볼리비아의 석유산업을 장악하고 있던 외국 석유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국내 석유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횡적 횡포를 부림에 따라 급진적 군부 정권은 그에 대응하여 이들 외국 석유기업들을 국유화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의 중요성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국유화의 요구가 그다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베네수엘라가 OPEC을 통해 석유로 인한 이익을 국유화 이전에 이미 충분히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의 국유화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에콰도르의 경우는 수익성이 줄어든 외국기업이 오히려 국가에게 자신의 지분 매입을 요구함으로써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1960-70년대 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유화는 결국 산유국들이 석유와 같은 전략적 자원 사업에서 처해있는 과도한 종속구조를 벗어나 석유수익의 혜택을 정당하게 분배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유화의 성격은 이데올로기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조건에 따른 합리적 선택과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석영. 2007.『중남미 자원민족주의-에너지 자원과 동광의 국유화 사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김기현. 2009.「라틴아메리카 석유산업의 국가 통제 강화: 자원민족주의인가, 국가적 합리성인가?」. ≪라틴아메리카연구≫, 미출간.

박구병. 2007.「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선린정책'과 멕시코의 석유 국유화」. ≪라틴아메리카연구≫, 20(4): 79-104.

갈레아노· 에두아르도. 1988.『수탈된 대지. 라틴아메리카 5백년사』. 박광순 옮김. 서울: 범우사.

엥달· 윌리엄. 2007.『석유 지정학이 파헤친 20세기 세계사의 진실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체제와 그 메커니즘-』. 서미석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Brown, J. C. 1985. "Jersey Standard and the politics of Latin American oil production, 1911-1930." in J. D. Wirth(ed.). *Latin American oil companies and politics of energy.*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50.

Cordey, Pierre-André. 2005. "Business and State Relations in Latin America. The Rol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Peru." Doctoral Dissertation. Faculty of Economics and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Fribourg in Switzerland.

De las Casas, Gustavo. 2007. "Ideology or Rationality? Explaining state-firm cooperation in the Latin American energy secto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7 mini-APSA conference of the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at Columbia University.

Durán, E. 1985. "Pemex: The trajectory of a national oil policy." in J. D. Wirth(ed.). *Latin American oil companies and politics of energy.*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45-188.

Grayson, G. W. 1989. "Oil and Latin American Politics."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24(3): 201-211.

Hawkins, Roberts G. and Mintz, Norman and Provissiero, Michael. 1976. "Government takeovers of U.S. foreign affili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7(1): 3-16.

Hernández-Grisanti, Arturo. 1974. "La nacionalización del petróleo en Venezuela." *Nueva Sociedad,* 14: 34-39.

Ingram, G. 1974. *Expropriation of U.S. Property in South America: Nationalization of oil and copper companies I Peru, Bolivia and Chile.* N.Y.: Praeger Publishers.

Jova, Caroline. 2006. *Nationalization in Bolivia: Curse or Blessing?* Miami: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enter.

Kennedy Jr., Charles R. 1992. "Relations between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of host countries: a look to the future." *Transnational Corporations*, 1(1): 67-91.

Klein, H. 1964. "American oil companies in Latin America: the Bolivian experience." *American Economic Affairs*, 18(2): 47-72.

Kobrin, Stephen J. 1985. "Diffusion as an explanation of oil nationalization or the domino effect rides agai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9(1): 3-32.

Lieuwen, E. 1985. "Latin American oil companies and politics of energy." in J. D. Wirth(ed.). *Latin American oil companies and politics of energy.*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89-225.

Martz, John D. 1987. *Politics on Petroleum in Ecuador.* N.J.: Transaction Publishers.

Odell, P. 1964. "Oil and the state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Affairs*, 40: 659-673.

Philip, George. 1982. *Oil and politics in Latin America. Nationalist movements and state compani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nelo, A. J. 1973.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s a force in Latin American Politics: A case of study of the international petroleum company in Peru.* London: Praeger Publishers.

Randall, L. 1989. *The political Economy of Mexican Oil.* N.Y.: Praeger.

Rubio, Mar. 2003. "Oil and economy in Mexico, 1990-1930s." 2009년 5월 1일 검색. http://www.econ.udf.edu/docs/papers/downloads/690.pdf

Sánchez, Rafael A. 1998. "El desarrollo de la industria petrolera en América Latina."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60(3): 157-179.

Sigmund, P. 1980. *Multinationals in Latin America: the politics of nationalism*.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Solberg, C. E. 1979. *Oil and Nationalism in Argentina: A Histor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Tapia Quiroga, Roberto. 2005. *Renacionalización: Travesía hacia la Era Boliviana de los Hidrocarburos*. Santa Cruz: RGP & Asociados.

UNCTAD. 2007. *World Investment Report 2007. Transnational Corporations, Extractive Industries and Development*. N.Y.: United Nations.

Wyant, F.R. 1977. *The United States, OPEC and multinational oil*. Mass.: Lexington Books.

김 기 현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118동 401호
E-mail: drkhkim@sunmoon.ac.kr

· 논문접수일: 2009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7일
· 게재확정일: 2009년 4월 27일